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한문화단지 내 한옥호텔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연구	신치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행환경 진단 및 향후 조성방향 제언	김승남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성은영
	무장애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실내건축기준 개선 연구	이은석
수탁 과제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	심경미
	우수 건축사 발굴 및 양성방안 마련 연구	김은희
	민영공원 제도 신설에 따른 수익적 시설 기준 마련 연구	손동필
	조경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상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연구	손동필
	2016년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사업	김은희
	행복중심복합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여혜진

수시과제

① 한문화단지 내 한옥호텔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연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세종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한문화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시설, 창작촌, 전시판매장, 한옥호텔 및 한류식당 등 한문화의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집적화하는 ‘한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공공 부문 주도로 추진하기에는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이 크며, 창의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초기단계부터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한 상황이다. 한문화단지 도입시설 중 한옥호텔은 민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시설이나 다른 건축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의 건축 공사비가 요구되며, 공간 활용 및 관리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호텔의 수익구조 보안을 위한 전략, 조세 및 금융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문화단지 내 한옥호텔의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한옥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방식과 민간투자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옥호텔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광진흥법」 등 민자유치 관련 법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한문화단지 조성계획 한옥호텔 건립(안)에 대한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자유치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치후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행환경 진단 및 향후 조성방향 제언

행복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대

규모 신개발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측면에서 매우 큰 상징성을 가진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행복도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내부 교통망을 구축하고, 도심 내 각 생활권에서 보행이나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의 설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교통 중심의 환상형 공간구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생활권과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양질의 보행환경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된 지역의 보행환경이 당초 계획 설계 목표에 부합하게 조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행복도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지에 대한 바람직한 조성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정책 이행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도시 1생활권에 대한 보행환경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건설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조성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도시의 보행환경 조성 과 관련된 기존 계획 및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행복도시 1생활권의 가로유형별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보행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의 향후 보행환경 조성방향을 제안한다.

김승남

3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최근 부동산 시장 수요의 하락은 경제의 저성장과 시장 침체 등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금성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에 편중되어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다양화하고 지속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현실 속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 주택의 건축

행위 역시 자본가들이 고급의 주택을 짓거나 혹은 자산의 증식의 방편으로 매매·임대하기 위해 최대용적률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로 빠르게 신축하거나 고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민들이며,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택의 성능이 낮거나 관리가 쉽지 않은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을 짓거나 고치는 데 봉착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지원과 유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규모 주택의 건축과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주택 성능 및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소규모 주택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원인을 분석한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민간 단독주택 건설 시장의 비정상적 주택건설 시스템을 정상적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법규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규모 주택의 품질 개선과 실용적 수단들을 연결하는 '안심 집짓기' 정책의 추진을 통해 소규모 주택건축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은영

4 무장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실내건축기준 개선 연구

건축물 내 미끄러짐, 충돌 등 생활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건축법」(법률 제12701호, 2014.5.28.)과 「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5, 2014.11.18.)이 개정되었다. 그에 따라 실내공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실내건축기준)이 마련(2015.10.)되었다.

현행 실내건축기준은 주로 방화, 추락,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의 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내건축기준 주요 내용은 화재에 대한 불연성 재료 사용,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마감재 기준, 추락에 대비한 안전난간 기준, 그 밖에 완충재료·실내출입문·설비배관 등의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기준은 일반인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고령 화사회에서는 사회약자들에 대한 실내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제도적으로 상충하거나 중복되는 점을 피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분석과 법령검토를 통해 실내건축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서면자문을 통해 법적 중복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내건축 기준의 법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무장애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실내건축기준 개선안은 수혜 대상의 확대, 적용 대상의 현황 반영, 적용범위 설정을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실내건축기준 개선안의 수혜 대상은 통상적 일반인에 한하던 것을 정상적인 보행 이동이 가능하지만 활동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으로 일반인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다. 건축물 적용 대상은 기존 실내건축기준의 적용 대상과 용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공·민간의 구분을 없애고 권고 대상을 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적용 범위와 해당 수준은 재료 또는 장식물을 대상으로 한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차별화하고, 무장애 디자인의 적용 수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실내건축기준에서는 무장애 디자인 기준의 저변 확대를 위해 권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실내건축기준 개선안이 고시되면 노약자 등의 실내생활에 있어 불편한 요소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건축물에 강화 적용되고 있는 무장애 디자인 개념을 민간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가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석

수탁과제

①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전문성과 지역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경관 형성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2009~현재) 및 민간전문가 지원사업(2015~현재)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총괄계획가 및 디자인검토위원이라는 민간전문가 제도와 디자인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통합적인 지역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민간전문가가 전체 또는 일부를 총괄하거나 조정·자문을 통해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2016년의 경우 밀양시·시흥시와 웅진군 백령도 등 3개 지역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2015년 연속지원으로는 강진군이 선정되었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2015년 연속지원으로 익산시, 평창군, 서울 서대문구, 대구 남구 등 6곳이 선정되었다. 2016년 신규지원은 부여군·고령군·횡성군·포천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지원사업의 운영과 모니터링을 기본적인 과업 내용으로 하면서,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실태(연계사업 추진 현황, 예산확보 여부 및 규모, 효율적 예산운용 현황, 관리체계 도입 여부, 민간전문가의 지속적 참여 여부 등)와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예산 교부방식, 유사 사업체계와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의 방안 검토를 통해 지원사업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지원사업의 성과 홍보와 지속성·필요성 확보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장소 중심 계획 수립과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관리기반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심경미

② 우수 건축사 발굴 및 양성방안 마련 연구

2014년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 업체 수는 약 9,100개, 종사자 수는 5만 7,000여 명, 연간 매출액은 5조 1,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업체 수는 약 70개로 전체의 0.8%이지만 그 매출액은 2조 1,000억 원으로 총 매출액의 40%가 넘는다. 반면 종사자 1~4인에 해당하는 업체 수는 약 6,800개로 전체의 75%나 되지만 매출액은 6,900억 원으로 약 13%에 불과하고, 그중 만 45세 미만의 신진건축사가 그 절반을 차지한다. 건축설계 분야의 산업구조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균형 있는 시장 형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신진건축사의 발굴과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수상전)과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전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120여 명의 우수한 신진건축사를 발굴하였고, 발굴된 건축사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우수 건축사 발굴 및 양성 정책사업 기획과 관리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 45세 미만의 신진건축사가 주요 대상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2016년도 정책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와 신진건축사 멘토링 프로그램 등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정책사업의 운영 및 관리, 홍보를 지원하며 2017년도 신규 사업 기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까지 추진한 정책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신진건축사 정책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우리 건축서비스산업계의 실태와 발전 동향, 신진건축사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희

③ 민영공원 제도 신설에 따른 수익적 시설 기준 마련 연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정부는 공원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중 절반 이상(62%)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상당수가 2020년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대다수를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어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5만m²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공원 면적의 70%를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30%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1만~5만m² 규모의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해 1만~5만m² 규모의 중·소규모 공원에 일부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설되는 민영공원 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시설을 발굴 및 유형화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수익시설의 유형별 설치기준을 종합하고 시각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민영공원의 예상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민영공원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도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동필

④ 조경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6년 1월 7일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5년 단위로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조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조경 분야가 직면한 여건 분석과 현안 발굴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조경정책 기본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전략별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관계부처와 기관 의견 수렴, 전문가 T/F 운영, 간담회 등의 연구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건강, 공간복지, 생물다양성 등 국가 및 도시환경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적 어젠다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조경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국민건강 증진, 녹색복지 및 형평성 제고, 생물종 다양성 향상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조경은 1970년대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복구를 위해 도입된 이후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환경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조경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나무와 꽃을 생산하고 심는 것'이나 '화장술로서의 조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공간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도 건축·도시·토목 분야의 부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규제완화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다. 조경산업 역시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침체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한 비전으로 '건강한 삶, 품격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구현'을 설정하였다. 3대 목표로는 조경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양적 공급 확충, 조경산업 진흥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 인적자원 개발 및 선진 조경문화 정착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전략으로 조경서비스의 가치 제고 및 품질 향상, 조경인프라 양적 공급 확대 및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조경산업 발전기반 구축, 조경 관련 제도 개선 및 R&D 활성화, 조경 교육기반 구축 및 인

적자원 개발, 선진 조경문화 보급 및 확산을 설정한 후 전략별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조경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규

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연구

2014년부터 법무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6년에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데, 국토교통부 협력사업 5곳[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1곳(서울 구로),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 4곳(경북 김천, 부산 사하구, 강원 동해, 인천 동구)], 국민안전처 협력사업 5곳(국민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인 대전 서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 세종, 울산 동구), 법무부 자체사업 2곳(전북 익산, 경기 고양)의 사업대상지를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은 낙후한 근린 주거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예방 측면에서의 컨설팅을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취약지역에 최소한의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여 거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범죄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법무부는 학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별 기초자료조사와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활용한 범죄위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범죄위험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CPTED 기본원리와 건축·도시 계획요소에 따른 물리적 계획기법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에 적합한 종합 기초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추후 사업대상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별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결과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당위성

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별·범죄유형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수립하고, 지속적·거시적 관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도시 공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손동필

⑥ 2016년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사업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1인당 GDP 2만 8,000달러, 세계경제순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자살을 포함한 사고성 사망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3위(10만 명당 70.2명) 수준이다. 아직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매우 높다.

이에 2014년 국민안전처는 46개 지방자치단체 시범운영 및 전국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사고·화재·범죄·안전사고·자연재해·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 안전지수를 정식 공개하였고, 이후 지역별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망자 수 감축으로 측정되는 지역별 안전지수를 높이고자 국민안전처가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토대로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성과 달성 목표 설정, 사업추진주체 및 거버넌스 구축, 중간지원조직 구축, 중점개선지구 및 안전인프라사업과 안전문화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17개 지자체의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주요 내용 및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종 성과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차별성으로는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업부서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부단체장을 총괄 팀장으로 구성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단속, 확인·점검, 교육·홍보 등 3대 핵심 수단을 적극 활용토록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 기관과 컨설팅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 사망자 수 감축과 안전지수를 제고하는 한편 2010년 안전도시, 2014년 안심마을, 2015년 안전마을에 이어 지역기반 안전문화 실현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은희

⑦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의 주민센터가 원스톱 커뮤니티 서비스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토록 하기 위해 주민센터,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의집, 체육관과 주민에게 전면 개방되는 알파룸으로 구성된 공공청사 및 주민복합센터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이다. 세종시 신도시지역 21개 생활권에 22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6년 12개 시설의 준공·착공·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남은 10개 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방안을 개선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화된 여건에 대응한 특화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생활권 단위 인구·가구 특성 및 최근의 계획이슈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시설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 이용자 사용 후 평가, 주민 수요조사, 주민 인식조사, 운영 관리자 면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고자 이뤄졌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전략으로서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디자인 특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디자인 관리체계 개편, 복합커뮤니티센터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생활권 단위 주민 생활의 중심 장소가 조성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혜진

2016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안전처,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Walkable & Safe City)’를 주제로, 국내외 보행환경 정책과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보행환경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보행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미국 앤 무돈(Anne Moudon) 교수(워싱턴대학교)는 ‘안전한 보행자, 건강한 도시’를 주제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 거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무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뒤를 이어 발표한 박소현 교수(서울대학교)는 ‘보행의 혜택, 착각과 재확인’이라는 주제로, 걷기의 의미와 보행의 장점을 소개하고 걷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다루었다. 먼저 일본 마쓰이 야스히로 주석 연구원(교통안전환경연구소)이 ‘도로횡단 중 노인 보행자 시야의 특성’을 주제로, 노인 보행자들의 보행안전에 연령·시력·차체색상 등이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강진동 과장(서울시 교통운영과)이 ‘보행자 교통안전정책’을 주제로, 도심 보행길 조성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서울시의 보행안전 추진 사업을 소개하였다.



‘보행안전의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마리오 J. 앨버스(Mario J. Alves) 국제보행자연맹 사무총장이 ‘유럽 교통안전 이야기 산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는 유럽이 직면한 교통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이어 심재익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보행안전을 위한 실질적 접근’을 주제로,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행섬 설치 등 횡단보도 환경 개선과 50/30 속도 전략 도입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하동익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8명의 보행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에는 보행안전과 관련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 학생 등 모두 220여 명이 참석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문화 확산 전략을 공유하였다.

백혜인

2016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11월 4일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16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을 열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정책과 한옥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한옥포럼을 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옥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2회의 한옥포럼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옥마을의 모습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옥마을 이야기의 두 번째 장으로, 최근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조성된 한옥마을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첫 번째로 조영규 소장(금성건축사사무소)이 ‘강릉 한옥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통미와 신기술을 적용하여 주변 문화재(오죽헌)와 소통하는 21세기 한옥 체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과 그 과정 속에서 고민한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최유종 교수(충북대학교 건축학과)가 ‘세종 한옥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전통 한옥마을의 공간개념과 현대적 편의성을 반영한 한옥마을을 신도시인 행복도시에 건설하는 계획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치후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이 ‘한옥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전국에 조성된 한옥마을의 추진 현황과 조성된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을 통해 향후 한옥마을 조성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김성우 명예교수(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권영상 교수(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석순 소장(아름터건축사사무소), 김주식 팀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특화경관팀), 안국진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 북상규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과 발제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방청객과 함께 한옥마을 조성사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무엇보다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성 목적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방식과 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였다.

이번 포럼은 ‘박제되어 있는 한옥마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찾고, 살고 싶어 하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획·계획·시공 등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눈 뜻 깊은 자리였다.

이민경



2016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주관하는 '녹색건축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 포럼이 11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2011년 이후 6회째를 맞은 '2016 녹색건축한마당' 내 녹색건축세미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녹색건축을 연구하면서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4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녹색건축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녹색건축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포럼은 4개의 주제발표와 발표별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첫 주제발표에서 박환일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전망'과 관련하여 녹색산업의 정의·특징·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강화와 정치적 위기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 차정하 대표(써스테라파트너스)는 '부동산 펀드 및 개발사업 수익성 확보 방안'으로서의 녹색건축'과 관련하여 녹색건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는 김서철 부사장(㈜소프트벤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물에너지 진단 및 관리 플랫폼'을 주제로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과 진단서비스 및 핵심기술, 주요 서비스, 기대효과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컨설팅 시장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민현준 소장(㈜친환경계획그룹 청연)의 발표가 이어졌다. 민 소장은 서울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녹색건축물 적용과 그린리모델링 효과, 그리고 녹색건축물의 미래를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과 함께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Hall C에서는 2016 녹색건축한마당 전시도 진행되었다. 이곳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의 소개와 녹색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및 추진성과, 향후 녹색건축신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패널을 전시하였다. 또 최근 개발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건축산업과 다양한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정소윤



CPTED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6일과 10월 28일 2회에 걸쳐 CPTED 세미나를 열었다. 범죄예방 환경연구센터는 CPTED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CPTED의 이론적 지식함양과 실무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6일 열린 세미나는 '범죄예방 디자인 이론적 배경 및 적용 사례'라는 주제하에 이경훈 교수(고려대학교 건축학과)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 교수는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범죄 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CPTED의 접근 방식과 세부 전략을 설명하였다. 특히 CPTED 적용에 있어 4단계의 프로세스(현황 파악 → 계획 수립 → 전략실행 → 유지·관리)를 소개하며 현황 파악을 위한 범죄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였다.

10월 28일에 'CPTED 관련 표준과 적합성 평가체계'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인 박현호 교수(웅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박 교수는 CPTED 표

준 현황으로 국제표준·국가표준·단체표준에 대해 설명하였고, 국내 CPTED 관련 인정·인증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표 사례로는 2016년 7월과 8월에 걸쳐 진행된 안산시 1차 시범사업을 꼽았으며, 실제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개별 주택 방법 제품을 설치한 이후 침입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감소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범죄예방시설로서 침입방지 인증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주력해야 함을 설명하며, CPTED의 실효적 대안으로서 방법 하드웨어에 의한 타깃 하드닝(Target Hardening: TH)을 강조하였다.

이들 세미나는 CPTED 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국내 시범적용 사례를 통해 실무적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슬기



2016 제5차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지난 11월 9일 군산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올해의 마지막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auri 마을재생 세미나'는 재생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요 이슈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올해 총 다섯 번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5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산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군산대학교 미술학과에서는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을 통한 학생들의 재생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재생에서 공공미술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접근·개선하는 것으로, 최근 마을재생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군산대학교 학생들의 프로젝트와 연계하고자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아티스트 젤리장 작가와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를 모시고 '마을과 예술의 만남, 공공미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발제자들의 특강과 토론시간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시도와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갖는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내년에도 도시재생 참여주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네트워크 구축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변은주

좋은 공공건축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8월부터 좋은 공공건축 세미나를 열고 있다. 지난 8월 1차 세미나(공공도서관 조성 과정 및 개선사항-청라국제도서관 및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9월에는 2차 세미나(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과정 및 개선사항 논의-한성백제박물관, 시화호 조력발전 홍보관을 중심으로)가 개최되었으며, 이어 10월 5일 3차 세미나와 11월 14일 4차 세미나, 12월 21일 5차 세미나가 열렸다.

'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 과정 및 개선사항 논의'를 주제로 지난 10월 5일 열린 3차 세미나는 황재식 대표(디자인·랩)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 사례(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북서울미술관)를 참고하여 전시시설 설계와 추진 과정의 특징,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문화·집회시설의 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좋은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한 원칙과 지향점'을 주제로 11월 14일 열린 4차 세미나는 신승수 대표(주)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신 대표는 2014년 출간된 저서 「슈퍼 라이브러리」의 기획 의도와 발간 배경, 국내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지향점, 좋은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어 참석자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21일 열린 5차 세미나는 '공공건축'을 주제로 박인수 대표(파키즈건축사사무소)의 강연으로 진행하였다.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건축산업의 지향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제도 개선과 업무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김지현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한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시상식과 전시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고 있다. 2016년도에는 '도심 속 한옥'을 주제로 준공·계획·사진 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준공 부문 3개,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30개 등 모두 51개 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준공 부문 '올해의 한옥대상'에는 서울 은평구의 '목경헌'(황두진건축사사무소 황두진)이 선정되었다. 목경헌은 '한옥의 전통적 구성과 현대건축의 세밀함이 조화를 이룬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획 부문 대상은 한옥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한 '를: 서촌을 위한 비한옥'(한국예술종합학교 이소영)이 수상하였다.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이 갖는 아름다운 선과 공간 구성을 잘 담아낸 '점·선·면'(김용준)이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700여 개 작품이 출품되어 한옥공모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도심 속 한옥'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용도의 수준 높은 한옥 건축물과 계획안이 제시되어, 한옥이 과거를 넘어 현대적 삶의 공간에 자리 잡고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신치후

2016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시행한다. 지난 10월 26일과 28일에도 각각 서울 건설회관과 세종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유경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건축 우수사례’ 소개에 이어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 ‘제안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방식’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먼저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국무총리상(대상)을 받은 ‘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에 대하여, 사업의 MP로 활동한 박정아 선임님(구산동도서관마을)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를 통해 구산동도서관마을의 건립 배경과 추진체계, 주민과 전문가들의 협의로 풀어진 조성 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을 주제로 오성훈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교육이 이어졌다.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유형들을 설명한 오성훈 연구위원은 특히 공공건축과 공공의 역할, 공공건축을 위한 원칙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엄철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제안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방식’을 소개하며, 제안공모 방식의 시행절차 및 설계발주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약 350명의 공공건축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 사업에 적합한 설계발주방식 선정 등에 대해 공공건축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건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희

news



도시재생 스타트업 토크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2월 6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도시재생 스타트업 토크쇼'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크쇼는 국토교통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연구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16 도시재생 한마당' 내 오후 세션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근린형 도시재생의 최전선인 실행 단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활동을 소개하고,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도시재생 스타트업은 유희공간을 활용해 지역 쉼표를 위한 팝업 식당 '테스트키친 서울'을 운영하는 '로컬디자인무브먼트', 공간의 유희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앤스페이스'와 같이 도시재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창작하고 운영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이번 토크쇼에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고 이끌고 있는 주체들이 참여하여,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윤주선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기조발제로 행사의 문을 열었으며, 오창민 사무국장(협동조합 성북신나)의 사회로 본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토크쇼는 두 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다. 1부 '유희공간, 콘텐츠와 만나다'에는 김수민 대표(로컬디자인무브먼트), 김지은 대표(블랭크), 이상욱 대표(어반하이브리드), 정수현 대표(스페이스클라우드), 홍주석 대표(어반플레이)가 참여하여 도시의 유희공간을 콘텐츠화한 도시재생 스타트업 주체들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2부 '청년, 지역으로 창업하다'에서는 김동찬 대표(만인의 꿈), 김인혁 대표(너나들이 충주청년협동조합), 전충훈 대표(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 최광운 대표(천안청년들)가 지역의 자원,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 배경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석자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번 토크쇼는 도시재생의 실행주체로서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활동과 가능성을 소개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도시재생의 실행주체 발굴을 고민하는 지자체와 전문성 있는 우수 도시재생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이 되었다.

윤주선, 박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해비타트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11월 17일 한국해비타트 대회의실에서 빈집 정비 등 주거복지 사업과 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빈집 정비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의 연계 지원 및 실행 ▲주거지 재생 사업의 정책 발전을 위한 정보·인력의 교류 및 협력 ▲집수리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해비타트는 앞으로 빈집 정비 및 사회주택 확산 등 주거권 회복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두 기관의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백혜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1월 24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중회의실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조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조성사업 홍보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해 온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환경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혜인